지역발전 위한 필수인력…한국생활 정착 환경 조성 시급

긴급점검

광주·전남 외국인노동자 안전한가

〈하〉 공생의 일터 만들어야

차별·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과 인식 개선 필요
캄보디아 마을 등 집성촌 도움
정부·지자체·사업주 연계 지원
고용시스템 대대적 개선 추진을

광주·전남 지역민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성 참사'에서 대부분의 희생자가 외국인노동자들인 것 처럼, 광주·전남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농·어촌과 산업현장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는 점에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업종별 일반 고용허가제(E-9비자)와 특례고용허가제(H-2비자) 외국인노동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광주·전남 외국인 노동자중 제조업 9573명, 건설업 751명, 농·축산업 2659명, 어업 4360명, 서비스업 90명이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계절근로(E-8비자) 외국인 노동자도 지난해 상반기 전남에 3733명이 배정됐다. 이주노동자 인권운동가들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수는 훨씬 더 많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전남지역 농·수·축산업 등 주요현장 경우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의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산업 현장의 한 축을 떠맡고 있지만 이들과 공존하고 공감하는데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소수의 이방인으로 취급, 차별과 멸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며 인권침해 행태도 끊이질 않으면서 기본적 인권 보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마음놓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찬호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의 캄보디아인들이 모여사는 마을이나 월곡동의 고려인마을 등과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집성촌'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8년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와 2살 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A씨는 한국에 와서 문화 차이로 가장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이슬람교도인 A씨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 전통을 따라야 했지만 무슬림을 위한 음식을 제공하는 곳도 없어 외식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지금은 괜찮지만 학생이 되면 차별받고 소외감을 느끼진 않을까 벌써 걱정된다"고 말했다.

문화적 연대가 비교적 활성화 돼 있는 '광주 고려인 마을'도 비슷한 상황이다.

박찬용 고려인 한인이주 광주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고려인 마을 학생들이 50여명 되는데, 대부분 한국어를 하지 못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한국인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언어 차이로 무리에서 겉돌며 융화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적의 고려인들이 광주와 전남에 유입될 텐데,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면 한국어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업 현장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지 않아 사업주와 의사소통문제 등으로 부작용이 잇따르는 실정이지만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지역 노동계 시각이다.

외국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사업주'간 연계를 맺고 있고 이들의 적응을 위해 주거, 교통, 언어적 측면에서 사업주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호주는 3년간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해진 지역에 거주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해 어디서나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캐나다 애틀랜틱 지역은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학생, 전문직·기술자, 숙련직 등 3개 분야로 나눠 학위를 취득하고 직무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주성 광주외국인노동지원센터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조항은 많지만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외부용역업체에 소속시키는 등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음성적 구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고용 시스템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횡단보도 인근 보행자 사망사고 버스기사 무죄 왜?

법원 "보행신호 보고 인도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것 예측할 수 없어"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보고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어 버스에 치여 숨졌다면 버스기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버스기사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갑자기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 들것을 예측 할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무죄 판결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를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5일 오후 2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사거리 교차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B(여·75)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3차로를 주행하다 전방 신호등에 정지 신호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확인하고 정지선을 향해 시속 26.2㎞ 속도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버스 옆 인도에서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걷다가 횡단보도 20m앞에서 보행신호가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몸을 왼쪽으로 틀어 3차로에 진입해 사고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도로에 진입하려던 지점에서 사고 충격 지점까지 거리는 약 9.3m이나 버스 정지거리는 약 9.5~11.7m로 A씨가 B씨를 인지한 후 급제동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낮았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규정속도보다 저속으로 운전한 점, 정면을 주시하고 있었고 충돌시 즉시 급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어떠한 과실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사고 현장이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이고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23년의 버스운전 경력이 있는 A씨는 충분히 무단횡단 보행자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버스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시점과 사고가 난 시점까지 8초의 차이가 존재했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시점까지 8초간의 간격은 존재하지만 처음 5초 동안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각선 방향으로 보행했거나 뛰어가는 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3초만에 사고가 발생했고 봐야한다. A씨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한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서 지인 살해 도주…12시간만에 여수서 체포

목포에서 지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12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경찰은 3일 40대 남성 A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여수시 한 주택가 2층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B씨의 소재를 파악하던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의 현장 확인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여수로 달아났으나 12시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3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전국 한우농가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에서 전국한우협회 소속 회원들이 퍼포먼스를 위해 축사 모형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축산농 1200여명 한우 반납 상경 집회

전국 1만2000여명 한우법 제정·사룟값 인하 등 촉구

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한우 농민이 경영난을 호소〈6월 11일자 광주일보 6면〉하며 상경 집회를 열었다.

전국한우협회는 3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우 산업 정상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을 열었다. 한우 반납 집회는 지난 2012년 이후 12년만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남 지역 한우 농민 1200여명을 비롯해 1만 2000여명의 농민이 모여 결의문을 낭독하고 한우법 제정, 사룟값 인하 등을 요구했다. 한우협회 간부 12명은 삭발 투쟁도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금 한우 농가는 지난 5월 기준으로 한우 한마리를 키워 팔 때마다 23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어 연간 4000호 농가가 폐업할 정도로 절망적이다"며 "농협은 조직 수익에만 혈안이 돼 있고, 정부는 물가안정에만 급급해 농민을 방관하고 있는데다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한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한우 농가의 희망을 꺾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집회에서 한우법 제정, 한우 암소 2만마리 긴급 격리, 사료가격 인하, 사료구매자금 등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과 분할상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날 협회는 트럭 15대를 동원해 전국의 소를 끌고 국회에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시도했으나, 경찰 저지로 무산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